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14
----------	-------

발의연월일 : 2021. 6. 2.

발 의 자 : 송기헌 · 김승원 · 김영호  
박성준 · 백혜련 · 소병철  
안규백 · 윤건영 · 이상헌  
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 · 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등).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생략)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u>&lt;신설&gt;</u>	<u>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u>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u>	제8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u>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u>
	1. <u>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u>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p>② · ③ (생략)</p>	<p><u>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u>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u> <u>2. 징계 등 사유가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u> <u>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u> ② · ③ (현행과 같음)</p>
-------------------	--